



금융위원회

보도자료



금융감독원

보도시점 2023. 7. 26.(수) 16:00 배포 2023. 7. 26.(수) 13:00

- 퇴직연금의 과도한 자금이동 위험 (머니무브 리스크)을 차단하기 위해 - 금융권이 앞장서서 퇴직연금의 분납과 만기 다변화를 추진한다.

'23.7.26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고용노동부·금융감독원·금융협회와 함께 퇴직연금 관련 시장 안정 간담회를 개최하였다.

- (일시·장소) '23.7.26(수) 15:00,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
- (참석자) **금융위**(상임위원, 자본시장국장, 자산운용과장), **고용부**(퇴직연금복지과장)
금감원(부원장보, 연금감독실장), **금융협회**(은행·생보·손보·금투·여신·저축)

금일 간담회는 퇴직연금 시장에서의 자금이동(이하 머니무브) 관련 리스크를 점검·논의하고, 금융권에서 추진할 수 있는 리스크 완화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마련되었다.

【 '23년말 퇴직연금 머니무브 가능성 점검 】

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336조원*을 넘어서는 등 지속 증가함에 따라,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과 적립금 운용상품의 만기가 특정 시점에 집중될 경우 머니무브로 인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.

* 퇴직연금 적립금(조원) : ['19] 221.2 ['20] 255.5 ['21] 295.6 ['22] 335.9

금년중 DB형 퇴직연금*의 상황을 점검한 결과, ①기업들이 금년에 납입해야 되는 DB 신규 부담금(추정)은 38.3조원 수준으로 이중 25.6조원(66.7%)이 12월에 납입될 것으로 예상되고, ②DB 운용적립금 190.8조원('23.6월 기준) 중 71.4조원(37.4%)이 12월에 만기가 도래할 것으로 추산된다.

* DC·IRP는 특정 시점 만기 편중도가 낮아 머니무브와 큰 관련이 없다는 평가

현재 시장상황이 안정적이나 상황 변동에 따라 전년처럼 자금유치를 위한 고금리 경쟁 등 시장 변동성 확대가 재연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.

이에 따라 금융권은 퇴직연금 시장에서 사용자이자 퇴직연금사업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책임감을 갖고 먼저 앞장서서 연말에 예상되는 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.

【 대응(1) 퇴직연금 분납 및 만기 다변화 】

① 퇴직연금을 납입하는 사용자로서 금융회사들은,

- (i) 12월이 되기 전에 본인들이 신규 납입하는 금년도 DB형 퇴직연금 총 부담금(3.2조원)의 40% 이상을 2차례 이상 분산·분납하는 한편,
- (ii) 기존 적립금의 12월 만기 도래분(7.7조원)에 대해서도 만기 다변화 (예: 1년 6개월)를 추진하기로 하였다.
- (iii) 각 협회는 금융회사들의 분납 및 만기 다변화를 적극 유도·권고하고 계획과 이행상황을 취합하여 금융당국과 공유하기로 하였다.

② 이와 함께 퇴직연금상품을 기업에게 제공하는 퇴직연금사업자로서 금융회사(은행·보험·증권)들은 퇴직연금 상품 제공시 1년 만기 외에 다양한 만기 상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.

【 대응(2) 고금리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규율체계 확립 】

지난해 회사채시장 경색 등으로 일부 금융권에서 유동성 부족이 일어났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금융회사들은 퇴직연금 유치를 통한 자금조달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. 이 과정에서 타기관의 금리 공시를 보고 더 높은 금리를 사후적으로 제시하는 금리 베끼기(소위 컨닝 공시), 원리금보장상품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변칙적 원리금보장상품 제공, 수수료(웃돈)를 통해 대기업 등 특정 사업장에만 고금리 상품을 제공하는 등 과당 경쟁이 관찰된 바 있다.

이와 같은 과당 경쟁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,

- (i) 고용부에 등록된 퇴직연금사업자가 아닌 非사업자가 제공하는 원리금 보장상품에 대해서도 퇴직연금사업자와 동일한 공시의무를 부여하고,
- (ii) 사실상 원리금보장상품임에도 관련 규제를 회피하고 있는 변칙 파생 결합사채도 원리금보장상품의 규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한편,
- (iii) 수수료 수취 · 제공 금지를 통해 수수료(웃돈)를 활용한 고금리 원리금 보장상품 제조 관행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,

「퇴직연금 감독규정」을 개정중으로 9월중에는 개정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.

【 대응(3) 분납 확산 계획 】

오늘 금융권을 필두로 하여 공공기관 · 대기업에도 부담금 분납을 권고할 예정이다. 이러한 계획은 지난 7월 발표된 「'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」에서 확정된 바 있다.

< 참고 : 「'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」 발표 내용('23.7.4.) >

- 공공기관·금융회사·대기업 퇴직연금(DB형)의 만기분산 등*을 추진하여 특정시기 자금이동 집중을 방지(기재부·고용부·금융위)
- * 부담금 납입 일정 분산 및 운용상품 만기 다양화 권고, 금리 공시 대상 확대 등

아울러, 분납 유도를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도 관계기관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.

【 기대효과 】

연말 납입 예정인 DB형 퇴직연금 신규 부담금(추정)에서 금융권(3.2조원, 12.6%), 공공기관(1.7조원, 6.6%), 대기업(10.4조원, 40.4%) 비중 감안 시, 과반 이상(60% 내외)의 신규 납입액을 분산시킴으로써 급격한 자금이동에 따른 시장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
【 향후 계획 】

권대영 상임위원은 “앞으로도 금융당국은 퇴직연금 등을 포함한 상품간·업권간 금융권의 자금이동을 밀착 모니터링하여 자금시장의 급격한 쏠림 및 이로 인한 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업권과 함께 지속 소통·점검해 나갈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	책임자 담당자	과장 사무관	고영호 서지은	(02-2100-2660) (02-2100-2661)
	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	책임자 담당자	과장 사무관	손재형 남성욱	(044-202-7554) (044-202-7557)
	금융감독원 연금감독실	책임자 담당자	실장 팀장	이창운 최은실	(02-3145-5180) (02-3145-5190)
	은행연합회	책임자 담당자	본부장 부장	김경민 여인채	(02-3705-5050) (02-3705-5390)
	금융투자협회	책임자 담당자	본부장 부장	나석진 문유성	(02-2003-9011) (02-2003-9230)
	생명보험협회	책임자 담당자	상무 부장	김인호 유제상	(02-2262-6645) (02-2262-6624)
	손해보험협회	책임자 담당자	상무 부장	신종혁 이형걸	(02-3702-8525) (02-3702-8531)
	저축은행중앙회	책임자 담당자	상무 부장	최병주 하태원	(02-397-8602) (02-397-8650)
	여신금융협회	책임자	상무	김민기 이태운	(02-2011-0711) (02-2011-0710)
		담당자	부장	김효석 백승범	(02-2011-0743) (02-2011-0619)

